

학술지 평가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(요약)

< '13.7.17(수), 학술진흥과 >

1 그간의 경과

- 학술지 (발행)지원 시작('91) 및 학술지 등재제도 도입('98)
- “학술지 지원제도 개선방안('11.12.)” 및 同방안 후속조치('12.6.) 추진
 - 개선방안 발표후 학술지 등재제도의 유지 필요성에 대해 대학, 학계 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의견 제시
- 공청회('13.7.10), 설문조사('13.5.) 등 학술지 등재제도 관련 현장 의견 수렴

⇒ 대학 현장의 대비 상황과 학계의 여건 성숙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'14년 학술지 등재제도의 일방적 폐지는 시기상조(時機尙早)

- 예정대로 학술지 등재제도를 폐지할 경우 현장의 큰 혼란이 우려

2 학술지 등재제도 개선방안

- 기본방향
 - '14년 예정된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 계획을 유보하되, 그간 지적된 문제점*을 바탕으로 학술지 등재제도 개선 추진
 - * 등재제도의 평가요소가 형식요건 중심으로 치우쳐 학술지의 실제적인 질을 평가하기 어렵고, 모든 분야에 동일한 평가기준이 적용되어 학문분야의 특성이 미반영

□ 주요 개선사항

- 체계·형식 요건의 비중이 높은 기존의 평가를 질 평가 중심으로 개편하여 학술지 등재제도의 관리 기능 강화
 - 아울러 각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구성함으로써 평가의 합리성 제고
 - * 학계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학술지 등재제도 평가방식 및 항목을 조정
- 학계를 중심으로 학술지 평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계의 자율평가 역량을 제고

< 위원회 구성방안(안) >

- 위원회의 의의 및 주요 기능
 - 학문분야별 저명한 학자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술지 등재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계 자율평가 역량 제고
 - 위원회는 평가항목 및 방식 자문, 평가 결과에 대한 최종 심의 등의 역할 수행
- 조직 및 구성
 - 8개 학문분야별로 총 2~4명*씩 총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결정
 - * 학문분야별 위원수는 각 학문분야별 학술지의 수를 감안하여 조정
 - 각 학문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(母학회)의 추천을 받아 위원 후보자를 구성하고, 학계 인지도, 공정성, 참여의지 등을 감안하여 선발
 - 위원 명단과 담당 분야를 공개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, 위원의 평가에 대한 책임성 확보
- 등재학술지는 계속평가를 받는 대신 3년마다의 간소화된 재인증 심사를 받도록 하여 계속평가 부담을 경감
 - * 등재학술지의 질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중심으로 재인증 심사 요건을 구성
- 현장의 여건이 성숙되면, 학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학술지 등재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의를 거쳐 폐지시기 재(再)결정

3 학술지 지원제도 개선방안

□ 기본방향

- 학문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학술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학술지 지원을 유지하고, 소외·신생학문분야 학술지 지원을 강화

□ 주요 개선사항

- (우수학술지) 기존 우수학술지 지원사업의 신규과제 선정은 중단
 - ※ 이공분야는 '세계적학술지육성사업'과 '국제학술지 지원사업'을 통합하고, 학술지의 발전가능성, 역량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
- (국내학술지) 학문의 다양성, 연구 저변의 확보 차원에서 국내 학술지 지원 규모를 '12년 수준으로 유지
 - 또한 지원 단가 하한을 정하는 등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, 역량 있는 학술지에 인센티브*를 지원
 - * 동 인센티브는 학술지가 SSCI 및 A&HCI, Scopus에 등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
- (신생·소외) 신생·소외 분야 및 융·복합 분야 학술지에 대해 국내 학술지 지원시 선정평가 가점 부여 및 지원 금액 추가 등 우대

4 향후 계획

-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 계획 유보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발표('13.7.19)
- '13년 학술지지원사업 시행계획* 마련(~'13.8.)
 - * 국내학술지 지원, 신생·소외 학문분야 우대 및 별도 지원 계획 포함
- 학계 중심의 위원회 구성(~'13.10.)
- 학술지 평가 기준 마련 및 신생·소외 분야 지원 방안 확정(~'13.12.)